

**2022년 인천광역시교육청-인천교사노동조합**  
**단 체 협 약 서**

**2022. 4. 8.**

**인천광역시교육청**

**인천교사노동조합**

# 2022년 인천광역시교육청 - 인천교사노동조합 단체협약

## 전 문

인천광역시교육청(이하 “교육청“이라 한다)과 인천교사노동조합(이하 “인천교사노조“라 한다)은 헌법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,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원의 근로조건 등 경제적·사회적 지위 향상과 바람직한 교원노동관계 형성을 위하여 본 단체협약을 체결한다.

## 제1장 총칙

### 제1조 【적용범위】

본 협약은 교육청과 인천교사노조 및 공립학교 교원인 인천교사노조의 조합원에게 적용된다. 이 협약에서 학교는 공립 유, 초, 중, 고, 특수학교를 모두 포함한다. 교육청은 본 협약의 내용 중 공사립 교원의 지위 향상 등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립학교에도 시행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.

### 제2조 【협약의 존중 및 타 단체와의 관계】

- ① 교육청은 본 협약 사항에 대해서 관계 법령 등에 저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천교사노조와 협의 없이 그 내용을 저하시킬 수 없다.
- ② 교육청은 교원의 임금, 근무조건, 후생복지 등 경제적·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하여 인천교사노조와 체결한 협약과 다른 단체의 교섭요구안이 상충될 경우 해당 안전에 대하여 인천교사노조와 사전 협의를 한다.
- ③ 교육청은 인천교사노조에게 타 교직단체 및 공무원노조와 동등한 대우를 하며, 불평등한 관련 규정 및 지침이 없도록 한다.

### 제3조 【조례·규칙의 제·개정】

교육청은 교원의 근로조건 등 사회·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조례, 규칙을 제·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인천교사노조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다.

## 제2장 노동조합 활동

### 제4조 【노조 활동의 보장】

- ① 교육청은 관련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조합 활동을 보장하며, 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지 않는다.
- ② 교육청은 단체협약 합의사항을 공문으로 시행하고, 단위학교장이 전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도록 지도한다.
- ③ 다음 각 호의 조합 활동은 학생수업과 학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.
  1. 교육청과 인천교사노조의 단체교섭에 교섭위원으로 참석
  2. 교육청과 인천교사노조의 정책협의회
  3. 대의원과 중앙위원으로서 대의원대회, 중앙위원회 참석
  4. 노조 집행위원으로서 집행위원회 참석
  5. 조합원 대상 연수 및 행사
  6. 집행부의 조합원 대상 교원노조 업무 수행
- ④ 교육청은 학생수업과 학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교사노조가 주관하는 월 1회, 2시간 이내의 교내·외 조합원 교육을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방과 후에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.
- ⑤ 교육청은 바람직한 교사 노사관계 형성과 부당노동행위 예방을 위하여 교육청이 직접 관장하는 교원연수기관의 자격연수 및 신규교사 연수 과정에 노사관계의 이해 연수 실시와 인천교사노조의 강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- ⑥ 교육청은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및 신규교사 연수에서 교직원단체 홍보 자료의 게시 및 배포를 허용한다.
- ⑦ 교육청은 인천교사노조의 전임자가 임기를 마치고 복귀할 시에는 원칙으로 복귀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후임 충원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동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의 희망을 고려하여 배치할 수 있다.
- ⑧ 교육청은 다른 교섭단체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교육청 홈페이지 하단 배너 영역에 인천교사노조 홈페이지 연결 배너를 설치한다.
- ⑨ 교육청은 인천교사노조가 학교 내 게시판 설치를 희망할 경우 학교 시설 사용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.
- ⑩ 교육청은 수업 및 학교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홍보 활동 등 정당한

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한다.

- ⑪ 교육청은 교육청이 주최하는 교원의 근무조건, 후생복지 등 경제적·사회적 지위 향상과 관련된 세미나, 공청회 등에 인천교사노조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.
- ⑫ 교육청은 인천교사노조 전임자 허가 신청 시,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를 인정한다.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중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, 승진, 연금산정, 전보인사 또는 그 밖에 신분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.
- ⑬ 교육청은 학생수업과 학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합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수-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연수를 분기별 4시간 이내 학교장이 허가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.
- ⑭ 인천교사노조가 지정하는 전임자에게 ice-talk 메신저 계정을 제공하여, 노동조합 활동에 사용하도록 한다.

#### **제5조 【노조 활동 중 재해】**

교육청은 인천교사노조의 전임자 또는 비전임 조합원이 ‘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’ 제6조 및 ‘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교섭 관련 협의와 정책 협의회에 직접 참여하는 과정에서 질병·사고 등 재해를 당한 때에는 「공무상재해보상법」등 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공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
#### **제6조 【인천교사노조와 사전 협의】**

교육청은 공무원노조 등 타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시 교원의 근무조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인천교사노조의 의견을 듣도록 한다.

#### **제7조 【부당노동행위 예방】**

- ① 교육청은 바람직한 교원 노사 관계 형성을 위하여 교육연수원에서 주관하는 자격연수 과정에 관련 과목을 개설하도록 노력한다.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사 관련 과목의 개설·운영에 있어 사전에 교원노조 단체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한다.

#### **제8조 【시설 편의제공】**

- ① 교육청은 인천교사노조가 요구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정 규모의 사무실 및 조합 활동에 필요한 집기, 사무기기 등 통상적인 비품을 적법한 절차를

거쳐 제공하도록 한다.

- ② 교육청은 인천교사노조가 교육청 및 교육청 산하기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, 당해 기관의 관리·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.

### 제9조 【조합비 일괄 공제】

교육청은 인천교사노조가 조합원의 조합비를 급여에서 일괄 공제하여 지급하고자 할 경우, 관련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대상자의 조합비를 공제하여 지정계좌에 예금하고, 『개인정보보호법』 제17조에 따라 정보제공을 동의한 조합원에 한하여 인천교사노조에 공제 내역을 통보한다.

### 제10조 【통지 및 문서 발송 편의제공】

- ① 교육청은 인천교사노조의 요청이 있을 경우,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자료, 정보에 대하여 열람과 사본의 제공을 허용한다.
- ② 교육청과 인천교사노조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상호 제공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재한다.

#### 1. 교육청 제공 사항

가. 교육청 및 직속 기관의 조직표

나. 교육통계연보 등 교육청 등록 각종 간행물

다. 각급 학교에 보내는 공문 중 노조가 요구한 공문

(교원단체 및 교원의 근무 여건, 교육정책 관련 등)

라. 교원의 정기전보 인사발령 사항

마. 단체협약 이행 관련 공문

바. 교육청 주요 업무 계획 등

사. 각급학교에 배부되는 정부, 교육부, 교육청 간행물 중 노조가 요구한 자료

#### 2. 인천교사노조 제공 사항

가. 규약의 변경사항

나. 인천교사노조의 임원 현황

다. 인천교사노조가 발행하는 정기간행물

- ③ 교육청은 인천교사노조가 교육청에 각종 문서를 발송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, 이첩을 요구할 경우 교육적으로 필요한 문서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.

### 제11조 【정책협의회 구성 · 운영】

교육청과 인천교사노조는 단체협약 이행사항 협의, 인천교육정책, 교육 현안 등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정책협의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 · 운영한다.

1. 협의는 반기별로 1회, 3시간 내로 실시하며, 교섭이 진행 중일 경우 교섭 관련 회의로 대체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예는 양측 협의에 의해 추가 개최한다.
2. 교육청 대표는 국장급 이상으로 하고, 1회는 교육감을 원칙으로 하되, 양측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.
3. 협의 안건은 2주일 이전에 통보한다.
4. 개최시기-협의안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상호 협의하에 결정한다.

## 제3장 교원의 전문성 보장 및 업무 정상화

### 제12조 【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】

- ① 교육청은 교원능력개발평가에 참여하지 않는 교원에 대해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지도한다.
- ② 교육청은 교원능력개발평가 시 학생 만족도 조사, 학부모 만족도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강제하거나 유도하지 않도록 지도한다.
- ③ 교육청은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결과 처리 단계에서는 원자료 열람 요청 처리, 결과 분석 및 능력개발계획서 작성, 운영결과보고서 작성, 평가 결과 활용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업무는 평가 관리자인 교감이 직접 처리하도록 지도한다.

### 제13조 【교원 차등성과급제 폐지】

교육청은 교원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 폐지를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등, 교원 차등 성과급제 폐지를 위해 노력한다.

### 제14조 【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】

- ① 교육청은 2급 정교사가 관련 규정에 따라 교육경력 3년 이상이면 1급 정교사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.
- ② 교육청은 교육청이 주관하는 자격연수와 직무연수에 대한 연수 경비를 지원

하고 연수 여비는 관련규정에 따라 지급한다.(단, 학교 내 전문적학습공동체는 제외한다.)

- ③ 교육청은 교육청이 인정하는 특수분야 직무연수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자비 부담 직무연수에 대하여 연수 기관에 납부하는 연수경비의 교원 1인당 지원 금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, 출장처리 할 수 있다.
- ④ 교육청이 주관하는 직무연수는 학교당 일률적인 인원배정을 지양하고 연수대상자는 연수과정의 내용 및 본인의 희망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한다. 단, 의무연수과정은 예외로 한다.
- ⑤ 교육청은 초등학교 과학과 실험 연수와 관련하여 교사의 연수선택권을 존중하며 질 높고 다양한 형태의 연수로 개설하되, 희망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.
- ⑥ 교육청은 교육연수원 주관 연수프로그램 편성 시 교원수요조사를 실시하고, 인천교사노조에서 의사를 개진하였을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한다.
- ⑦ 교육청은 교원이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연수기관 또는 근무 장소 이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, 별도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지도한다.
- ⑧ 교육청은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교장 · 교감 자격연수를 방학 중에 실시하도록 노력하며, 자격연수가 학기와 중복될 경우 정상적인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보강을 실시할 강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.
- ⑨ 교육청은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해외연수를 「교육공무원법」 제41조에 따라 자율연수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별도의 보고서를 원칙적으로 제출하지 않도록 지도한다.
- ⑩ 교육청은 민간·공공기관(단체)의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특수분야 연수기관 심의·관리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도록 하며, 연 2회 신청·심의를 원칙으로 한다. 단,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로 연 1회 추가 신청·심의할 수 있도록 한다.
- ⑪ 교육청은 1급 정교사 연수를 받은 이후에 교사가 희망할 경우, 교과별 30시간 이상의 연수를 일정 기간마다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.
- ⑫ 교육청은 교육청이 주관하는 학기중 선발연수에 교사가 선발되었을 경우, 강사채용을 통해 해당 교사가 연수를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- ⑬ 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교내 자율장학 계획 외에 별도로 수업장학을 하고자 할 경우 해당 교사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안내한다.

- ⑭ 교육청은 자율연수비 지원을 유, 초, 중, 고, 특수, 기타, 각종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 전체로 확대하고, 지원 범위를 다음과 같이 확대한다.
- 가. 교육부 장관 및 17개 시도 교육감이 승인한 자율연수(특수분야, 원격연수와 관련된 연수 경비: 학습 중인 연수 교재비 포함)
  - 나. 교원의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직무 연수 (예: 교과교육, 생활지도(교육), 상담 등)
  - 다. 창의적 체험활동 등 학교 교육과정운영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활동
  - 라. 직무 관련 공인(국가, 민간) 자격증 취득 연수
- ⑮ 교육청은 학교에서 자율연수비를 지원할 때 교원 1인당 연수 경비를 횡수 제한 없이 연수경비(여비제외)의 100%(최대 250,000원)까지 하도록 권장한다.

### 제15조 【연구 환경 조성】

- ① 교육청은 교사들이 자율적인 교과 모임을 대상으로 사업 공모를 할 경우, 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선정기준을 사전에 공개하며, 전문성 있는 교원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.
- ② 교육청은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과, 학년별 연구 활동 및 동아리의 활성화를 위해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「학교회계 예산편성 및 운영지침」에 반영되도록 지도한다.
- ③ 교육청은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 학습 연구년제가 합리적으로 확대 ·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- ④ 교육청은 교과, 학년별 연구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학교에 교과 · 학년별 연구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고, 교과 · 학년 협의회비를 학교 예산에 반영되도록 권장한다.
- ⑤ 교육청은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교원의 교육강사 수당 강사료 기준 변경 시 관련 부서 의견수렴과 검토를 거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- ⑥ 교육청은 교원이 야간 또는 계절제 대학원을 수강할 경우 교육 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수강할 수 있도록 한다.

### 제16조 【컨설팅 장학】

컨설팅 장학은 학교의 희망에 따라 자율적으로 신청하여 실시하도록 하며, 장학위원회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한다.



### 제17조 【연구·시범학교 및 각종 공모사업 운영 개선】

- ① 교육청이 자체 지정하는 연구·시범학교 공모는 학교교육계획 수립 이전(전년도 말)에 완결하도록 하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학기 중에 추가로 공모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.
- ② 교육청은 단위학교의 연구·시범·교육실습협력학교 및 공모 사업을 신청할 때, 교직원협의회를 반드시 거쳐 교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을 시 응모할 수 있도록 하며, 사전에 민주적 절차 및 과정에 대해 제반 사항을 전 교사에게 안내하도록 지도한다.
- ③ 교육청은 연구·시범학교 공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한다.

### 제18조 【교원 승진 및 인사 제도 개선】

- ① 교육청은 미래 교육환경에 적합한 교사승진체계가 마련되도록 교장, 교감 및 교육 전문직 인사의 임용 및 승진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.
- ② 교육청은 교원인사제도 개선 시 현장 교사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인천교사노조의 참여를 보장한다.
- ③ 교육청은 학교가 교장공모제 대상학교 지정을 신청할 때, 사전에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교장공모제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.

### 제19조 【교원인사자문위원회】

- ① 교육청은 각급학교에서 교원인사자문위원회가 민주적으로 구성·운영되도록 지도한다. 각 학교의 교원인사자문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한다.
  - 1. 교무업무분장에 관한 사항
  - 2. 보직교사 임명에 관한 사항
  - 3. 교과 전담교사와 학급 담임 배정에 관한 사항
  - 4. 포상 후보자와 해외 연수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
  - 5. 기타 교원인사에 관한 주요사항
- ② 교원인사자문위원회의 자문내용에 대하여 학교장은 학교 교원인사자문위원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그 결정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한다.

## 제20조 【교원인사관리 원칙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】

교육청(교육지원청 포함)은 교원 인사 관리 기준 수립을 위한 협의회에 인천 교사노조에서 추천한 위원을 1인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.

## 제21조 【전보 제도】

- ① 교육청은 교사초빙제가 취지에 맞게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지도하고, '교사초빙제 운영 지침' 유의사항의 적용을 지도하여 초빙교사제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.
- ② 교육청은 교원의 정기전보 인사발령 시 학사 일정과 주거지 확보 등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1월 안에 실시한다.
- ③ 교육청은 성희롱 및 교권침해 등으로 인한 피해 교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생활근거지를 고려하여 긴급 전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.
- ④ 교육청은 해당 교사가 본인의 전보 자료를 공개 요청할 경우 본인의 자료에 한하여 공개한다.
- ⑤ 교육청은 교육과정운영과 학생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규 교원의 희망에 따라 법정 육아휴직 기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.
- ⑥ 교육청은 전입 예정 학교에 업무분장, 임시 출근 등의 사유로 방문해야 할 때 현 소속 학교에서 출장 처리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.

## 제22조 【법정 교원 수 확보 및 교육 지원 강화】

- ① 교육청은 정규직 교사를 확보하기 위해 행 · 재정적 노력을 한다.
- ② 교육청은 학교에서 사회복지무요원을 신청할 경우 배치되도록 노력한다.
- ③ 교육청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급당 학생수가 20명이하 수준이 되도록 노력한다.

## 제23조 【학습지도안의 자율적 작성】

- ① 교육청은 학습지도안, 주간학습계획안, 일일교육계획안을 작성하여 결재하는 것을 폐지하고, 형식과 내용 모두 교사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도록 하며 이수 집계표는 수기 작성하지 않도록 한다. 또한, 연간지도계획은 교과, 학년 협의회를 통해 자체 수립하도록 한다.
- ② 교육청은 교내 장학 수업 및 학부모 공개수업 시 학습지도안을 작성하여 결재하는 것을 강요하지 않고, 형식과 내용 모두 교사가 자율적으로 작성하여 활용하도록 안내한다.

## 제24조 【교원 업무 정상화】

- ① 교육청은 교사가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무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.
- ② 교육청은 학교 업무 분장 시 학교구성원의 민주적인 의견수렴과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지도하고 업무표준안 작성을 위한 사업부서별 업무협의회 운영 시 인천교사노조를 포함한다.
- ③ 교육청은 각 부서에서 직종별 업무표준안 마련을 위한 관련 계획 수립 시 관련 교사를 포함하여 협의하도록 안내한다.
- ④ 교육청은 법정 장부 이외의 학교장 장부, 비업무 승인장부, 기타 장부는 교원 업무 경감 차원에서 폐지하되, 교육적으로 필요한 장부에 한하여 교직원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비치하도록 지도한다.
- ⑤ 교육청은 외부행사 안내, 각종 소식지, 공통지시 전달사항은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하도록 노력하되, 학부모의 회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에서 그 방법을 결정하도록 한다.
- ⑥ 교육청은 보호자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교육외적 활동에 학생을 동원하지 아니한다.
- ⑦ 교육청은 학교 내 각종 위원회 회의록 간소화 지침을 마련하여 안내한다.
- ⑧ 교육청은 학교장이 위임전결규정을 정비하여 결재과정을 간소화하도록 지도한다.
- ⑨ 교육청은 국회·시의회 등의 자료 요구 시 교사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하여 가급적 이미 구축된 교육통계자료를 활용한다.
- ⑩ 교육청은 교원의 업무경감을 위해 교과서 관련 업무 중 교과서 선정 외의 업무를 담당하지 않게 지도한다.
- ⑪ 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단체 활동을 교사와 학생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한다.
- ⑫ 교육청은 영재교육기관의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시 학교별 추천 인원 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도록 지도한다.
- ⑬ 교육청은 교사의 방과후학교 업무경감을 위하여 방과후학교 예산 관련 업무시스템이 효율적으로 구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교원단체를 포함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한다.
- ⑭ 교육청은 초등학교에서 돌봄 관련 업무를 교사가 담당하지 않도록 지도한다.

- ⑮ 교육부 지침(교수학습평가과-5336, 2021. 8.9)에 따라 교육청은 방역 인력 채용 업무가 교사에게 부과되지 않도록 한다.
- ⑯ 교육청은 방과후강사, 기간제 교사 등의 성범죄 조회 업무가 민주적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안내한다.
- ⑰ 교육청은 관계회복과 소통중심의 학교폭력전담기구 운영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률이 정한 바 이외에 불필요한 보고 및 공문발송 등을 축소하도록 노력한다.
- ⑱ 교육청은 법령에 의한 교직원 의무교육 및 연수(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자 교육, 성희롱 예방교육 등)를 통합개설하도록 노력하고 관련 정보를 학년 초에 제공하도록 노력한다.
- ⑲ 교육청은 각급학교에서 CCTV관련 업무 추진 시 합리적인 업무분장을 하고 관련 부서가 협조하여 추진하도록 지도한다.
- ⑳ 교육청은 스쿨뱅킹 미납 학생 독촉 업무 등을 교사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도록 지도한다.
- ㉑ 교육청은 공립유치원의 전출입 관련업무 분장이 민주적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안내한다.
- ㉒ 교육청은 (테마식) 현장체험학습 답사의 경우 보험에 가입된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.
- ㉓ 교육청은 각급학교에서 전문업체가 실시하는 연 1회 이상의 교내외 대청소를 예산에 편성·운영하도록 지도한다.
- ㉔ 교육청은 다문화 가정 및 외국 국적을 가진 학생, 학부모와의 소통을 도울 수 있는 실질적인 통번역 및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.

## 제25조 【교원의 근무조건 향상】

- ① 교육청은 교원의 근무조건 향상을 위해 단위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학교별 실정에 맞는 부서체계와 업무분장을 조직·운영하도록 한다.
- ② 교육청은 수업시수 협의 시 학교별·교과별 교사 현황 및 특성, 업무분장 등을 고려하여 단위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수렴 과정(학년, 교과협의회 등)을 거쳐 조정하도록 권장한다.
- ③ 교육청은 학교장에게 교사가 자녀돌봄휴가를 신청할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라 허가하도록 지도한다.
- ④ 교육청은 각급학교의 복무 결재권자가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라 교원의

복무를 NEIS로 승인하며, 사전 대면 또는 구두 보고하는 절차를 강요하지 않도록 지도한다.

- ⑤ 교육청은 법령에 의무 규정되지 않은 서약서는 폐지한다.  
(학생에게 징구하는 서약서:학교생활교육과)
- ⑥ 교육청(교육지원청 포함)은 단위학교에서 교사결원으로 인한 수업 결손이 발생할 경우 계약제교사 운영 지침에 따라 기간제 교사 및 시간 강사를 임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.
- ⑦ 학교지원단은 기간제교사 인력풀을 운영하여 단위학교에서 기간제교사 및 강사 채용 시 필요한 서류를 지원한다.
- ⑧ 학교장은 부득이 해당학교 교사가 보결수업을 할 경우 적정액의 보결 수업 수당을 지급하도록 노력한다.
- ⑨ 교육청은 학교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무업무시스템을 합리적이고 편리하게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한다.
- ⑩ 교육청은 학급 내 위기학생 발생 시 관리자가 협력하도록 지도한다.
- ⑪ 교육청은 필요한 문서만 발송하도록 ‘문서통제관’을 지정하여 학교 공문서 감축을 위해 노력한다.
- ⑫ 교육청은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학교로 발송하는 공문의 제목 앞에 ‘제출’, ‘참석’ 등의 공문서 성격을 표시하는 ‘공문서 성격표시제’를 시행하도록 노력한다.
- ⑬ 교육청은 학교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업무관리시스템과 ice-talk 메신저를 합리적이고 편리하게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.
- ⑭ 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특근매식비가 교사의 수요를 반영하여 예산에 편성·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.

## 제26조 【근로 및 휴게 시간】

- ① 교육청은 교사의 초과근무가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.
- ② 교육청은 교사의 자기 연찬 기회 확대를 위해 유,초,중,고등,특수,각종,기타 학교에서 교사의 방학 중, 재량휴업일, 기타휴업일의 일직성 근무를 폐지한다.
- ③ 교육청은 방학과 재량휴업일에 돌봄교실이나 도서관, 방과후 수업 등의 관리를 위하여 교사에게 일방적으로 근무를 명하지 않도록 지도한다. 단, 학생교육활동 관련하여 근무가 필요한 경우 학교 구성원의 토론과 투표 등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반영하여 운영 사항을 결정한다.

- ④ 교육청은 휴직자 또는 신규임용예정교사의 의사에 따라 새학년 준비 목적의 의무 출근을 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수당지급이 가능함을 안내한다.

#### **제27조 【생활기록부 업무 간소화】**

교육청은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경우 인적사항, 학적사항, 출결사항, 성적(교과 학습발달 등), 종합의견 외에 진로 희망 사항, 독서기록, 방과 후 활동, 자격증 인증, 창의적 체험활동 등의 기록항목이 최소화되도록 관련 지침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.

#### **제28조 【직위에 따른 구분】**

교육청은 직위에 따른 특성을 반영하여 학교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운영 지원하도록 노력한다.

#### **제29조 【학급당 학생수 감축】**

교육청은 일부 과밀 학급의 학습여건 개선과 함께 대규모 학교의 학습 및 생활 지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학급당 학생 수가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
#### **제30조 【교수 · 학습과정】**

- ① 교육청은 ‘인천시교육청 교육과정위원회’를 구성할 때 교사노조에서 추천한 교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.
- ② 교육청은 국공립 유치원 및 초·중·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위원회가 민주적으로 구성 ·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·지원한다.
- ③ 교육청은 교육과정 개편 등으로 교과목 간 교원 수급에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복수전공, 부전공 연수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노력한다.
- ④ 교육청은 초등학교에서 과정 중심의 평가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.
- ⑤ 교육청은 문예체 분야의 협력 수업 지원 사업을 지속한다.
- ⑥ 교육청은 각 학교에서 교사 고유의 교수학습권과 평가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.

#### **제31조 【민주적인 학교운영】**

- ① 교육청은 교직원 회의가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한다.

- ② 교육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안건 상정 등이 법적 절차에 따라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도한다.
- ③ 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교무회의 및 각종 협의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도한다.

### 제32조 【교구 및 교과서 선정】

교구 및 교과서 선정은 교과 협의회 추천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도한다.

### 제33조 【방과 후 활동】

- ① 교육청은 방과후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육부 및 교육청 지침에 따라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희망 교사가 실시하도록 하며, 학생을 강제로 참여시키는 형태의 교과 보충수업, 선행 교육 및 성적에 따른 일부 학생에 대한 예산지원 등 비교육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지도한다.
- ② 교육청은 초·중학교의 경우 경시대회와 특목고 진학을 목적으로 한 방과후 학교 운영을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, 중·고등학교에서 입학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학습 및 경시대회를 실시하지 않도록 지도한다.
- ③ 교육청은 방과후학교 담당교사의 업무경감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한다.
- ④ 교육청은 초등돌봄전담사의 부재 시에는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운영한다. 부득이하게 교사가 대체 근무할 경우 수당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한다.
- ⑤ 교육청은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(유치원돌봄 포함)의 마을확대 방안을 단계적으로 모색하여 학생 수요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- ⑥ 교육청은 초등학교의 돌봄교실 업무경감을 위한 행·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고, 초·중등학교의 방과후학교 행정업무로 인해 교사 본연의 업무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노력한다.
- ⑦ 교육청은 공립유치원 및 초등학교에서의 원격 수업 시, 등교하는 학생을 위한 원격 수업 지원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.

### 제34조 【자율학습 등】

- ① 교육청은 자율학습 운영과 관련하여 경비를 징수하거나 불법 모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도한다.
- ② 교육청은 중·고등학교의 자율학습과 관련하여 초과근무한 교사에 대하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의거 초과근무수당

을 지급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.

### **제35조 【감사제도】**

- ① 교육청은 학교 감사 시 교원의 교무업무 분야에 대한 감사는 가급적 교육 전문직이 담당하도록 하고, 학교자율종합감사를 확대·운영한다.
- ② 교육청은 감사결과를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하고 공통지적 사항 사례집을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안내한다.
- ③ 교육청은 특별감사 시 당해 학교의 사정을 고려하여 감사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의하에 인천교사노조가 감사를 참관할 수 있도록 한다.

### **제36조 【교육 예산의 편성 및 운영의 합리화】**

- ① 교육청은 학교예산 편성 시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교직원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편성하도록 한다.
- ② 교육청은 학교예산 및 결산 등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 지침이나 관련 규정에 따라 학교 홈페이지 게시 등 학교 실정에 맞는 공개 방법으로 교직원, 학부모에게 예산 확정 후 10일 이내에 공개한다.

### **제37조 【학부모 부담 교육비 경감】**

교육청은 교복, 체육복구매, 졸업앨범 제작, 현장체험학습(수학여행·수련활동 등) 학부모부담경비 사업에 있어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학부모 부담이 경감되도록 노력한다.

### **제38조 【학급운영비】**

- ① 교육청은 학교회계예산편성 기본지침에 학급운영비는 연간 학급당 30만원 이상으로 책정하도록 안내하고, 이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.
- ② 교육청은 각급학교에서 '학급운영비' 예산을 별도 편성하여 집행토록 지도한다.

### **제39조 【사립학교 지도 · 감독】**

- ① 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원 임용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제교사의 채용을 최소화하도록 지도한다.
- ② 교육청은 사립학교의 정규 교원 비율이 가급적 공립학교 수준이 될 수 있도록



록 적극 행정지도한다.

- ③ 교육청은 사립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반영해야 할 사항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공립과 동등한 지원기준에 의해 지원하도록 노력한다.
- ④ 교육청은 사립학교 내에서 부당한 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 한다.

#### **제40조 【학교평가 개선】**

- ① 교육청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육 활동을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학교 평가를 실시한다.
- ② 학교평가 결과는 학교 운영과 교육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지원 자료로 활용한다.

### **제4장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활동 지원**

#### **제41조 【공립유치원 확대】**

- ① 교육청은 공립유치원의 교원 정원수를 확보하도록 노력한다.
- ② 교육청은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시행한다.
  - 1. 공립유치원을 신·증설하여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한다.
  - 2. 초등학교 신설의 경우, 원아수용 여건 충족 시 3학급 이상의 병설유치원을 설치한다,
- ③ 교육청은 유치원 학급당(혼합학급 포함) 유아수를 지속적으로 감축한다.
- ④ 교육청은 공립유치원의 학급당 원아수를 각 항과 같이 감축하도록 추진한다.
  - 1. 만5세 학급은 26명 이하가 되도록 한다.
  - 2. 만4세 학급과 만 4,5세 혼합학급은 22명 이하가 되도록 한다.
  - 3. 만3세 학급은 16명 이하로, 만 3,4,5세 혼합학급은 20명 이하가 되도록 한다.

#### **제42조 【공립유치원 정책 마련 및 의견 수렴】**

- ① 교육청은 인천광역시유아교육위원회에 인천교사노조의 참여를 보장한다.
- ② 교육청은 인천미래유아교육협의회에 인천교사노조의 참여를 보장한다.

#### 제43조 【공립유치원의 교육여건 및 근무여건 개선】

- ① 교육청은 조직개편 시 유.초등교육과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도록 노력하고 유아교육 관련 부서 인력을 확대하도록 노력한다.
- ② 교육청은 유아교육 전문직(장학관, 장학사)이 적정 인원 선발되도록 노력한다.
- ③ 교육청은 유치원 (겸임)관리자의 누리과정 이해 증진과 민주적인 유치원 조직문화 확립을 위해 유치원 (겸임)관리자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한다.
- ④ 교육청은 교육(지원)청 유아교육 전문직의 현장 이해 증진과 민주적 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를 강화하여 실시한다.
- ⑤ 교육청은 교육과정 편성·운영 시 공립유치원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하고 보장한다.
- ⑥ 교육청은 공립유치원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유치원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누리과정에 명시된 운영시간(1일 4~5시간)을 융통성있게 편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.
- ⑦ 교육청은 공립유치원 교사의 근무시간을 보장하며, 출근 시간 이전 및 퇴근 시간 이후 업무를 부과하지 않는다.
- ⑧ 유치원장은 교육과정 보결수업이 필요할 경우 대체인력 투입을 원칙으로 하고, 부득이하게 공립유치원 교사가 보결수업을 할 경우 보결수업비를 지급한다.
- ⑨ 교육청은 신체활동, 바깥놀이 등 체육활동을 지도하는 공립유치원 교사의 피복비를 학교회계 예산에 편성·지원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.
- ⑩ 교육청은 공립유치원에서 미세먼지 및 기상악화로 인해 바깥놀이를 하지 못할 경우, 대근육활동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유희실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.
- ⑪ 교육청은 감염병 등으로 인해 원격수업으로 전환할 경우를 대비하여 공립유치원에 무선인터넷을 설치하고 노트북을 지급한다.
- ⑫ 교육청은 유치원 원내 체험학습을 '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 계획'에 따라 누리과정 내에서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하여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.
- ⑬ 교육청은 공립유치원의 방학 중 중식 제공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.

#### 제44조 【공립유치원 업무 정상화】

- ① 교육청은 공립유치원 내 의견 수렴 및 결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

록 안내한다.

- ② 교육청은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제출 공문 중 동일한 사항에 한해 병설유치원과 초등학교가 통합하여 보고할 수 있도록 한다.
- ③ 교육청은 동일한 내용에 대해 반복적으로 자료집계를 요구하지 않으며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, 공휴일에는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지 않는다.
- ④ 교육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근무시간 외에 문자메시지 및 메신저 등을 통한 업무 지시나 자료 제출 요구 등을 지양하도록 안내한다.
- ⑤ 교육청은 공립유치원 교사가 본연의 업무인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및 학급관리로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경감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
- ⑥ 교육청은 공립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방과후 과정 업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, 이를 바탕으로 방과후 과정 업무정상화를 위해 노력한다.
- ⑦ 교육청은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 내실화 계획에서 ‘방과후 과정 업무 담당자’ 지정 문구를 삭제하고,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의 업무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.
- ⑧ 교육청은 유치원 방과후 강사의 부재 시, 대체인력을 활용하도록 안내한다. 부득이하게 유치원 교사가 담당할 경우 적정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안내한다.
- ⑨ 교육청은 공립유치원 종일제(보결전담)강사지원 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한다.
- ⑩ 교육청은 유치원 교사가 법령에서 정한 복무·업무분장·근무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.
- ⑪ 교육청은 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업무표준안 마련을 위한 관련 계획 수립 시 유치원교사를 포함하여 협의한다.
- ⑫ 교육청은 공립유치원 교육실무 지원 업무표준안 마련을 위한 관련 계획 수립 시 유치원교사를 포함하여 협의한다.

#### **제45조 【특수교육 정상화】**

- ① 교육청은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의 실현성을 위하여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제27조 제3항에 따라 특수교육교원의 급당인원 배치기준을 준수하여 특수학급 설치 및 특수교사를 배치하고 과밀학급을 해소하는 데에 노력한다.
- ② 교육청은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시행규칙 제5조(보조인력의 역할 및 자격)에 따라 특수학교 및 각급 학교에 배치된 보조인력을 대상으로 역할,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, 장애학생 인권보호, 및 행동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

연수를 운영한다.

- ③ 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도전 행동으로 인한 교사의 신체·정신적 피해 발생과 관련한 교사 보호 조치 및 치유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한다.
- ④ 교육청은 교육활동 중 특수교사가 장애학생의 행동문제로 인해 물질적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 배상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.
- ⑤ 교육청은 특수교육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가급적 특수학급 업무 이외의 별도 업무를 부가하지 않도록 권장한다.
- ⑥ 교육청은 특수교사에게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돌봄업무가 부과되지 않도록 지도한다.
- ⑦ 교육청은 기관 소속의 특수교육 순회교사를 운영하기 위해 노력한다.
- ⑧ 교육청은 특수교육 관련 학부모 및 교직원 연수 등에서 특수교사의 교권을 보호하고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을 강조한다.
- ⑨ 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교직원(공무직 및 시간제 근로자 등 포함)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각종 의무연수를 원격과 집합연수로 관리한다.
- ⑩ 교육청은 교육부 ‘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’ (2018.12.19.)에 따라 특수학교에 특수교사 및 상담사 자격을 갖춘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도록 노력한다.
- ⑪ 교육청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근무하는 특수교사의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.
- ⑫ 교육청은 특수교육 업무 정상화를 위해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지급 처리 방식을 치료지원비 지급방식과 동일한 카드 결제 방법으로 전환을 추진한다.
- ⑬ 교육청은 특수교사에게 사회복지무요원(특수)의 급여지급 업무가 부과되지 않도록 지도한다.

#### **제46조 【학교 도서관의 활성화 및 사서교사의 근무조건 개선】**

- ① 교육청은 학교 도서관이 설치된 초·중·고등학교 중 사서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 사서교사가 우선 배치되도록 노력하고 1학교 1사서교사 배치를 목표로 노력한다.
- ② 교육청은 학교 도서관이 설치된 초·중·고등학교의 사서교사 정원수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.

- ③ 교육청은 학교 도서관 활성화 및 효율적 컨설팅을 위해 학교 도서관 운영을 전담할 사서교사 교육 전문직을 선발·배치되도록 노력한다.
- ④ 교육청은 주말 방학중(휴무일 포함) 학교도서관을 개방할 경우, 단위학교에서 이에 따른 필요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.
- ⑤ 교육청은 사서교사가 복무와 업무분장, 근무시간에서 다른 교원과 차별받지 않도록 지도한다.
- ⑥ 교육청은 학교도서관의 교육과정 지원 역할과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맞는 적절한 독서교육 및 독서생활지도를 위해 신설되는 통합학교(초등·중등)의 각 급간에 사서교사를 별도 배치하도록 노력하고, 불가능할 경우 보조인력을 지원한다.

#### **제47조 【보건교육 및 보건교사 근무 여건 개선】**

- ① 교육청은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- ② 교육청은 환경위생관리 업무 중 시설과 관련된 업무가 보건교사에게 부여되지 않도록 지도한다.
- ③ 교육청은 공기정화장치의 설치, 렌탈 등 시설과 관련된 업무를 보건교사에게 강요하지 않도록 지도한다.
- ④ 교육청은 공기질 검사, 정수기 수질검사를 실시한다.

#### **제48조 【장애인 교원의 근무조건 개선】**

- ① 교육청은 장애인교원의 처우 개선 및 장애유형에 따른 지원계획, 전보 등 주요 정책수립 시 장애인교원의 참여를 보장하고, 교원노조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한다.
- ② 교육청은 장애인 교원의 교육 활동 등에 필요한 업무지원 인력을 지원하고,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한다.
- ③ 교육청은 장애인 교원 업무지원 인력의 원활한 직무 역할 수행을 위해 장애인 교원 업무지원인력에 대한 연수 및 장애 이해 교육을 실시한다.
- ④ 교육청은 장애인 교원에 대하여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우선 발령 및 희망 근무지에 대한 의사를 반영하여 임용·전보하도록 노력한다.

#### **제49조 【학교 급식의 개선】**

- ① 교육청은 GMO 및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정책을 수립하여 학교급식에 건강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
- ② 교육청은 급식시설 현대화(오븐기, 냉·난방 시스템 등) 및 시설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.

#### **제50조 【학기 중 미급식일 중식지원업무 및 무상우유지원 문제 해소】**

교육청은 각급 학교의 행정력 낭비 등을 해소하기 위해 학기 중 미급식일(현장체험학습일 등)의 중식지원 방식을 개선하고, 재량휴업일은 지자체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. 또한 무상우유지원사업을 지자체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
#### **제51조 【영양교사의 근무조건 개선】**

교육청은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와 올바른 영양관리 및 영양·식생활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영양교사 또는 영양사를 교육청 예산 및 정원 내에서 추가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
1. 1일 2식 실시 교
2. 통합학교(유·초·중·고)
3. 과밀학교(학생수 1300명 이상 교)

#### **제52조 【고교학점제 운영】**

- ① 교육청은 기관 소속 고교학점제 교과전담순회교사를 운영한다.
- ② 교육청은 학교에 고교학점제운영에 필요한 사항(각종 규정, 계획서, 과목 안내서 등)을 지원한다.
- ③ 교육청은 고교학점제 운영 시 최소학업성취수준 미도달 학생 지원을 위한 예산을 학교에서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.
- ④ 교육청은 고교학점제 계획과 지원에 관하여 현장 교원 및 교직원단체의 의견 수렴 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한다.

## **제5장 교권**

#### **제53조 【교사의 교육권 보호 및 생활지도 업무 정상화】**

- ① 교육청은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 보호를 위하여 교사의 교육활동을 심각히 침해한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를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내용이

입법화되도록 노력한다.

- ② 교육청은 교사단체가 추천하는 평교사를 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.(단, 현재 교원위원 임기까지는 유예)
- ③ 교육청은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사안(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할 사안)발생 시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, 해당교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인천교사노조의 의견을 적극 청취한다.
- ④ 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를 받은 교사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하였으나 학교관리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신고가 교육청에 접수되면 해당 학교를 관리·감독한다.
- ⑤ 교육청은 연 1회 이상 학생, 학생의 보호자, 교직원 대상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 자료를 보급하여 각급학교가 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, 각 급 학교는 연 1회 이상 학생, 학생의 보호자,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.
- ⑥ 교육청은 각급 학교가 수업방해,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거부를 행하는 학생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한다. 학교는 교육구성원의 합의하에 징계 외 생활지도 규정을 마련할 수도 있다.
- ⑦ 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대처 방안을 매뉴얼화하여 각급 학교에 보급하며,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·감독한다.
- ⑧ 교육청은 각급 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의 보호조치를 지체없이 시행하도록 지도감독한다.
- ⑨ 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.
- ⑩ 교육청은 학교 내 갑질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갑질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, 접수된 사안의 종류와 경중을 고려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가가 조사·판단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.
- ⑪ 교육청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, 배치전환,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.
- ⑫ 교육청은 교사가 아동 학대 의심사례를 신고하고자 할 경우 학교장(원장)명의로 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.
- ⑬ 교육청은 상담활동 중 학생 및 학부모에 의해 발생한 교사의 심리적 피해 및

소진에 대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.

#### **제54조 【교육 활동 중 사고로부터의 교권 보호 및 예방】**

- ① 교육청은 교원의 각종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해 교원배상 책임보험에 일괄적으로 가입하도록 한다.
- ② 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의 회복 및 치유비 지원은 학교장 또는 피해 교원이 직접 신청할 수 있게 한다.
- ③ 교육청은 인천교사노조가 교원의 전문성 향상 및 교육활동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을 편성·지원할 수 있다.
- ④ 교육청은 교육 활동 중 일어나는 사고에 대하여 교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 해당 교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.
- ⑤ 교육청은 교권침해 방지를 위해 녹취시스템을 이용한 통화 녹음을 지원하고 녹취 청취 및 다운로드 방안을 마련·안내한다.
- ⑥ 교육청은 학교 민원 전화 시 교직원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안내하는 내용이 자동응답시스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- ⑦ 교육청은 『교육공무원법』 제48조와 『사립학교법』 제60조 및 『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』 제4조에 따라 현직 교원이 현행 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학교장의 동의 없이 학교 내에서 체포되지 아니하도록 한다.
- ⑧ 교육청은 학교에서 돌봄전담사 및 방과후과정 강사에게 학교 안전사고 및 학교폭력 대응 매뉴얼을 안내하고 관련 연수를 연1회 이상 실시하도록 지도한다.
- ⑨ 교육청은 교원단체와 교권관련 협의회를 연2회 이상 운영하며, 인천교사노조의 참여를 보장한다.
- ⑩ 교육청은 학교구성원 인권증진위원회에 인천교사노조에서 추천한 교사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노력한다.
- ⑪ 교육청은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또는 침해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서 피소를 당할 경우 민사·형사상 소송비용을 교원배상책임보험의 요건에 따라 지원한다.
- ⑫ 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의 상담이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.



### 제55조 【교사의 개인정보 및 초상권 보호】

- ① 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교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지원한다.
- ② 교육청은 교원의 전보 시에 포털기사 등으로 교사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전보 내용이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해서만 공유될 수 있도록 한다.
- ③ 교육청은 졸업앨범에 해당 교원의 동의를 얻어 사진을 올리도록 지도한다.
- ④ 교육청은 온라인 상에서 교원의 동의 없이 사진 또는 동영상이 공유되지 않도록 학생, 학부모, 교직원을 지원한다.
- ⑤ 교육청은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교원안심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원한다.

### 제56조 【성평등 및 성폭력 예방 및 규제 등】

- ① 교육청은 학교구성원으로부터의 성희롱 및 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학교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한다.
  - 1. 연 1회 이상 성평등 및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 실시
  - 2. 성희롱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 수립
  - 3.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의 마련
  - 4. 성희롱 고충담당자 지정
  - 5. 학교장이 성희롱·성폭력 사실을 인지한 경우 상담, 피해자 보호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, 즉시 관련 기관 신고 및 상급기관에 보고
  - 6. 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, 2차 피해방지를 위해 피-가해자 분리 및 인사 이동 시 동일학교에서 다시 만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관리기준에 명시
- ② 교육청 주관 교장, 교감 등의 자격연수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성평등 관련 교육 시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
### 제57조 【공익제보자의 인권보호】

- ① 교육청은 각급학교(사립학교 포함)에서 비리 관련 민원제기 및 내부고발한 사람의 인권 및 신변을 보호하고, 인사 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한다.
- ② 교육청은 민원제기 및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노출하는 공무원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 등 행정 조치한다.

## 제6장 교원 후생복지

### 제58조 【교원의 문화 활동 지원】

교육청은 직영하는 문화 체육 시설(교직원수련원, 학생교육원 등)을 교원이 이용하고자 할 때에 관련 조례에 따라 이용하도록 한다. (단, 학생교육원은 학생의 수련 및 현장체험활동 등 프로그램 운영의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이용 할 수 있다.)

### 제59조 【교원의 후생복지】

- ① 교육청은 학교별로 시설 여건을 고려하여 남·녀 휴게실을 각각 설치하고, 단위학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휴게실 설비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권장한다.
- ② 교육청은 탈의실과 샤워실 설치를 위해 신설 및 전면 개축학교는 설계에 반영하고, 기설 학교는 여유 공간 확보 시 설치하도록 지도한다.
- ③ 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문화행사, 체력단련 등 교원복지 예산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.
- ④ 교육청은 교무실, 연구실, 특별실 등의 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해 공기청정기 비치율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고, 진공청소기 구입비는 학교회계 예산 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구입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.
- ⑤ 교육청은 맞춤형복지 점수 200점을 교사 건강검진비(격년제)로 부여하고, 결핵검진비를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편성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.

### 제60조 【교원연구비】

교육청은 교원연구비가 월 75,000원으로 모든 교원에게 동일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한다.

### 제61조 【출장 여비와 연구비】

- ① 교육청은 교육 활동(현장체험학습, 수련활동, 야영, 수학여행, 교외 특별 활동 등) 출장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해 지급하고, 출장 중에 시간외근무가 발생하면 학교회계 편성 및 운영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.
- ② 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(수련활동, (비)숙박형 현장체험활동)이 교육과정 운영

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라 근무한 시간이 드러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전계획에 따라 교육 활동을 수행한 경우에 출장비와 시간외근무수당을 함께 지급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.

- ③ 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보결수업예산을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안내한다.
- ④ 교육청은 교사가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거주지를 이전하게 될 경우, 공무원 여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전비와 국내 가족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.

#### **제62조 【체육복 및 실습복】**

교육청은 교원의 실험 실습복, 중 고등학교의 체육담당 교사와 초등학교에서 체육과목을 직접 지도하는 교사의 체육복 및 운동화가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.

#### **제63조 【출산휴가 등 모자보호】**

- ① 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법령 등(규정, 예규, 지침 등)에 따라 출산휴가, 자녀 돌봄휴가를 신청할 경우 허가하도록 지도한다.
- ② 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법령 등(규정, 예규, 지침 등)에 따라 육아시간을 보장하도록 지도한다.
- ③ 교육청은 학교장에게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라 여교사의 출산휴가를 조산 · 유산 · 사산의 경우에도 허가하도록 지도한다.
- ④ 교육청은 여교원이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 등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 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.
- ⑤ 교육청은 자녀 출산 시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라 남교원의 특별휴가 10일이 보장되도록 지도 감독한다.
- ⑥ 교육청은 출산한 여교원을 위해 학교별로 시설 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유에 필요한 제반 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한다.
- ⑦ 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매 학기 초 육아시간 사용에 대해 안내하고 육아시간 사용 시 NEIS 상신 외에 별도의 구두보고 및 내부기안 등을 요구하지 않도록 지도한다. 또한 교육청은 교원의 육아시간 사용 관련하여 학교 내에서 어떠한 불이익이나 모욕적인 언행 등을 받지 않도록 지도한다.
- ⑧ 교육청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(유산 포함)후 1년 미만의 여교사에 대해서는

근무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
- ⑨ 교육청은 육아휴직 교원이 복직하는 경우 원적교 복직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후임 충원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동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의 희망을 고려하여 배치할 수 있다.

## 제7장 학생복지

### 제64조 【교육 시설 및 환경 개선】

- ① 교육청은 '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'에 따라 학교 자체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정 온도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.
- ② 교실의 조도는 300룩스 이상 유지되도록 한다.
- ③ 교육청은 「학교보건법」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실내 소음이 법정 기준 내로 유지되도록 한다.
- ④ 교육청은 관계 법령에 의거 각 급 학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, 그 내용을 공개하여 결과에 따라 조치토록 노력한다.
- ⑤ 교육청은 학교 시설에 오염 물질을 방출하는 건축 자재의 사용을 금지하고, 석면이 포함된 자재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친환경 소재로 교체하며, 학교 신·개축 시 새집 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.
- ⑥ 교육청은 각급학교의 화장실에 화장지, 비누 등 위생용품이 비치되도록 지도하고,유·초·중·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실의 경우 학교 실정에 맞게 학교 예산 범위내에서 일시적으로 청소업체와 계약하여 청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학교예산 편성을 지도한다.
- ⑦ 교육청은 지하수, 상수도 등 먹는 물에 대한 안전 검사를 실시하여 교직원 및 학생의 건강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.

### 제65조 【학생 복지】

- ① 교육청은 각급학교 매점 및 자판기가 위생적으로 관리되도록 하며,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에 따른 금지품목이 판매되지 않도록 지도한다.
- ② 교육청은 학교 화장실 용변기 개수를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하여 설치하고, 화장실 시설을 현대화하도록 한다.

- ③ 교육청은 학생들이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여성용품(생리대)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한다.
- ④ 교육청은 학교 신·개축 및 화장실 사업 시 여학생 대변기 수를 남학생 대·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고, 화장실 시설은 학생들의 체형과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현대화되도록 노력한다.
- ⑤ 교육청은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노동권 보호를 위한 '노동인권 교육'을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포함시켜 실시하도록 노력한다.

#### **제66조 【학생 자치활동】**

- ① 교육청은 학교구성원인권증진조례에 의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보장되도록 한다.
- ② 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의 자치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여 필요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,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- ③ 교육청은 각 급 학교에 학생 자치활동 공간(학생회의실 등)을 확보하고 일정 규모 이상 쾌적한 공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
## **부 칙**

#### **제1조 【유효기간】**

- ①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.
- ②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 체결 시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.

#### **제2조 【협약갱신】**

교육청과 인천교사노조 쌍방 중 어느 일방이 본 협약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 기간 만료 30일 이전에 갱신 요구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기간 중에 어느 일방도 갱신 요구안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에는 본 협약은 자동 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.

### 제3조 【보충협약 및 재교섭】

교육청과 인천교사노조 쌍방은 본 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보충협약 체결 및 재교섭을 요구할 수 없다. 다만, 경제적 · 사회적 여건의 중대한 변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본 협약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### 제4조 【이행계획서 작성】

교육청은 단체협약 이행계획서 초안을 단체협약 체결일로부터 4주 이내에 작성한 뒤, 인천교사노조와 의견 조율을 거쳐 국공립 유치원 · 초 · 중 · 고등학교에 배포한다.

### 제5조 【이행방법】

- ① 교육청과 인천교사노조는 본 협약의 항목별 이행 추진계획 및 결과를 정책협의회에서 점검한다.
- ② 교원노조에서 미이행 사례를 제시할 경우 교육청은 이를 확인하고, 이행 상황 결과에 따라 미이행 학교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도록 지도한다.
- ③ 교육청은 연 2회 인천교사노조가 요구하는 단협 사항에 대해 상호협의를 통해 이행점검표를 작성하여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미 이행학교에 대하여는 현장 점검 등 그 이행을 지도하며 이행결과를 정책협의회 개최 전에 서면으로 통보한다.
- ④ 교육청은 본 단체협약 내용에 대하여 공문 시행 등의 방법으로 학교장 및 교육청(교육지원청 포함) 소속 직원에게 안내한다.
- ⑤ 교육청은 각급 학교(원)장, 교(원)감,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 시 인천교사노조에서 요구하는 주요 단체협약 사항에 대해 안내한다.
- ⑥ 교육청은 각 과 업무 계획 및 추진 시 단체협약과 상호 충돌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한다
- ⑦ 교육청은 본 협약의 예산 관련 조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예산에 편성되도록 노력한다.
- ⑧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관계 및 노동관계 법규 등에 따른다.

### 제6조 【협약의 보관】

본 단체협약서는 이를 증거하기 위해 3부를 작성하여 교육청과 인천교사노조가 각각 1부씩 보관하고, 1부는 행정관청에 신고한다.

2022. 4. 8.

인천광역시교육감    도   성   훈

인천교사노동조합위원장    김   혜   지

---

---